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음 5월 20일) 제15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저온저장고의 싱싱한 과일

송하진 도지사는 22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을 방문하여 새만금 신항만의 농식품 전용부두 특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로테르담 항만의 과일전용 부두인 Fruit port 에 위치한 Sea-Invest사를 방문하여 로테르담 항만과 식품저장고 및 물류현황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예수병원, 서남대 정상화 주체 선정

임시이사회, 예수병원 유지재단 등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계획서 수용키로 이번 정상화 방안에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5가지 이행조건 모두 담아

서남대가 예수병원 측을 정상화 추진 주체로 선정하면서 구재단 측에 맞붙을 놓는 등 서남대 정상화를 향한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향후 교육부 결정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서남대에 따르면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 유지재단과 A 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기로 했다. 서남대는 지난해 재정기여자로 선정했던 명지의료재단이 재정난으로 지위를 박탈당한 뒤 새로 공모 절차를 밟았고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모했다.

이에 서남대 교수와 교직원 78%는 예수병원 컨소시엄과 함께 정상화에 힘을 모으겠다는 동의를 낸 바 있다. 서남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은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재정기여를 통한 정상화 추진주체로 새롭게 선정한 것이다. 결국 학교 운영권을 쥔 대학본부가 사실상 예수병원 컨소시엄을 지지하며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예수병원 컨소시엄은 의과대학을 유지하고, 재정기여금으로 620여원을 내놓기로 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일시금으로 현금 200여원과 부동산 220여원을 출연키로 하고 내년부터 5

년간 매년 40억원씩 200여 원을 추가 내줄기로 했다. 이번 정상화 방안에는 교육부가 맞춤형 컨설팅 결과 요구한 5가지 이행조건이 모두 담겼다. 예수병원 컨소시엄은 대학 특성화 및 발전방안을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했고, 남원과 아산캠퍼스에 설치된 32개 학과를 21개로 줄이는 학과구조개편을 진행키로 했다. 또 교수학습이나 취·창업센터 활성화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남대 이사회는 이와 별도로 종전 재정기여자였던 명지의료재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상화 계획서도 함께 교육부에 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관선 이사진이 제출하는 2개 정상화 계획서와 구 재단이 낸 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 재단은 설립자 이흥하씨가 만든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를 없애고 학교 자산을 매각해 정상화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는 서남대 의대를 살리려는 열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의 서남대 의대 존치 여부 결정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우려된다. 서남대학교 김경만 총장은 "서남대 구성원은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정상화 계획서에 구성원 다수가 동의함으로써 대학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구재단 종전 이사회의 범죄와 다름없는 정상화계획서를 반려했고 임시이사회를 통한 정상화 추진주체의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선관위 선거 여론조사

## 안심번호 활용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선거여론조사에 안심번호 활용 의무화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권자의 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강구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안심번호를 활용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및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또 응답률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비용은 여론조사 실시 또는 의뢰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은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 및 보도를 금지했다.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 등을 부여하고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가 불법을 저질러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해당 선거 종료시까지 그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 ▲선거구 획정위 의결 요건 완화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관련 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확보

선관위는 주민소환 절차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소환 투표운동 등을 정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표 요건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로 완화했다. /이성주 기자

##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의원총회 연기

### 입장차 커... 27일 다시 열기로

전북도의회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의원총회가 23일 소득 없이 연기됐다. 양용호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8명 의원들은 도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회지 후보 결정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소득 없이 헤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의장단과 삼임위원장직에 8명 모두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나가야 될 의원들만 나서자는 의견으로 양분 된 것

로 전해졌다. 모두 후보로 나서야 된다는 의견 측은 "다수당 횡포에 맞서야 된다"면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소수만 나서야 된다는 의견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당초 준비된 후보들이 나서게 됐다"며 실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제7대 김제시의회의 개원2주년

시민의 생각이 김제시의회의 생각입니다.

2016년 상반기 어린이인권 체험교실 영

김제시의의회